

- 창 간 회 의 록 -

(실시: 2026년 4월 23일)

개설 및 1차 목표 설정에 관한 기록

1. 작성 취지

「행정논평」은 단순한 개인 블로그나 일회성 문제제기 공간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 행정사건을 기록하고, 행정의 태도를 해석하며, **법령과 절차를 실제 대응의 언어로 바꾸어내는 독립 논평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 1차 회의록은 행정논평의 출발점에서 다음 사항을 처음으로 확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 첫째, 행정논평의 현재 위치
- 둘째, 행정논평의 1차 목표
- 셋째, 행정논평의 운영 원칙과 글의 구조
- 넷째, 초기 6개월 동안의 실행 방향

이 문서는 단순한 개시 기록이 아니라, 향후 행정논평의 판단과 운영을 지탱하는 기준 문서로서 남긴다.

2. 행정논평의 현재 위치

행정논평은 이미 1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행정논평은 막연한 구상이나 취미적 글쓰기 단계가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 주체를 갖춘 독립 콘텐츠 사업의 형태를 확보하였다.

다만 현 단계의 행정논평은 법적 의미의 등록 신문사나 제도권 언론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행정논평의 현재 위치는 지역 행정사건을 구조화하고, 이를 대응 가능한 언어로 전환하는 1인 독립 논평 플랫폼이다.

즉, 지금의 행정논평은 언론사 외형이나 협회 간판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실제로 읽히고, 인용되고, 반응을 끌어내는 실질적 영향력의 축적이다.

3. 행정논평의 1차 목표

행정논평의 1차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지역 행정사건을 기록·분석·절차화하여, 주민·상대방·행정청이 무시하기 어려운 독립 논평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

이 목표는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거나 게시물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행정논평의 글이 실제로 민원, 정보공개청구,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준비 등에서 참고될 수 있는 수준의 구조와 밀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논평의 글은 단순히 읽히는 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글은 가져다 쓸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글이어야 한다.

이 지점을 행정논평의 1차 목표 설정점, 곧 베이스 캠프로 정한다.

4. 행정논평의 정체성

행정논평은 뉴스 속보 경쟁을 하는 매체가 아니다. 또한 감정적 고발문만 반복하는 공간도 아니다. 행정논평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행정논평은

- 사건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구조화한다.
- 행정청의 태도와 절차를 기록 대상으로 삼는다.
- 법령을 추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전 대응 언어로 바꾼다.
- 결과보다 과정, 판단보다 근거, 분노보다 구조를 중시한다.
- 개별 사건을 넘어서 유사 사안에 적용 가능한 대응 기준을 축적한다.

따라서 행정논평은 개인 블로그와 등록 언론사 사이의 애매한 공간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논평은 지역 행정사안을 공론장용 기록물과 대응 매뉴얼로 전환하는 독립 논평 플랫폼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5. 행정논평 글의 기본 구조

행정논평의 본진 한 사이클은 다음의 5단계 카테고리로 구성한다.

- ① 사건기록
- ② 행정행태
- ③ 법령해석
- ④ 대응절차
- ⑤ 결과·복기

이 구조는 단순한 목차가 아니라, 행정논평의 브랜드 문법으로 사용한다. 행정논평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 5개 카테고리의 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편집한다는 뜻이다. 다만 글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모든 카테고리를 반드시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1개부터 5개까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각 카테고리에는 반드시 개별 제목을 부여한다.

행정논평은 이 구조를 통해 사건을 감정적 체험담으로 흘리지 않고, “기록→분석→해석→대응→복기”의 흐름으로 정리한다.

6. 베이스 캠프 도달의 판단 기준

행정논평이 1차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글의 형식이 반복 가능할 것.

. 행정논평 특유의 구조와 문체가 누적되어, 독자가 형식만 보아도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사건이 개별 글로 흩어지지 않고 축적될 것.

. 위반건축물, 석축, 형질변경, 정보공개, 처분사전통지, 회피성 답변, 감사 대응 등 유사 유형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아카이브를 형성해야 한다.

- 셋째, 글이 실제 문서 작성의 재료가 될 것.

. 민원서, 의견제출서, 정보공개청구서, 준비서면, 질의자료 등의 초안 또는 논리 재료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외부 반응이 발생할 것.

. 행정청이 답변을 보완하거나, 상대방이 해명하거나, 제3자가 제보하거나, 유사 피해자가 참고하는 등의 반응이 생겨야 한다.

- 다섯째, 최소한의 운영 규칙이 갖추어질 것.

. 제보 접수, 반론 기회, 정정 기준, 증빙 정리, 사건명 표기, 날짜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 규율이 성립해야 한다.

이 다섯 기준은 행정논평이 단순 게시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7. 현재 단계에서 하지 않을 일

행정논평은 시작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경계한다.

- ① 실질 축적 없이 신문사 외형부터 흉내 내지 않는다.
- ② 영향력 없이 협회 간판부터 만들지 않는다.
- ③ 속보 경쟁에 휩쓸려 행정논평의 고유한 강점을 버리지 않는다.
- ④ 모든 이슈를 다 다루려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 ⑤ 감정의 과잉으로 구조와 근거를 놓치지 않는다.

행정논평의 강점은 빠름이 아니라, **구조화·논평·법령해석·대응절차의 제시**에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행정청의 회피성 답변, 절차 하자, 법령 오독, 주민 대응 문제 등 강점이 살아나는 분야에 집중한다.

8. 향후 확장 방향

행정논평의 성장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단계

1인 독립 논평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2단계

제보자, 기고자, 사례 제공자, 현장 기록자를 포함하는 시민기자형 구조 확장

- 3단계

필요 시 등록 매체 또는 외곽 네트워크·협회형 조직으로의 확장 검토

이 순서의 핵심은 분명하다. 행정논평은 **지위보다 영향력, 외형보다 작동성, 선언보다 축적**을 우선한다.

9. 6개월 실행 로드맵

행정논평은 선언만으로 생명력을 얻지 않는다. 초기 6개월은 행정논평이 단순한 구성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독립 논평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기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월별 실행 목표를 설정한다.

① 1개월차(2026년 5월): 틀 고정과 출발선 정비

첫 달의 목표는 행정논평의 외형이 아니라 **운영 문법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행정논평의 본진 기본 구성을 정비하고, 행정논평의 정체성을 처음 방문한 사람도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내 구조를 마련한다.

동시에 본진 글의 기본 포맷을 확정하여, 이후 작성되는 글이 모두 같은 문법 아래 축적되도록 한다.

이 달의 핵심 과업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개 페이지와 운영 취지문을 정비한다.

나. 제보·반론·정정 관련 기본 안내 페이지를 만든다.

다. 사건기록 / 행정행태 / 법령해석 / 대응절차 / 결과·복기의 5카테고리 체계를 본진 구조에 반영한다.

라. 행정논평의 기준 문체와 제목 체계를 확정한다.

마. 본진 성격의 기준 글 2편 내지 3편을 작성하여 초반 아카이브의 뼈대를 세운다.

이 단계의 성패는 “사이트를 열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올 모든 글이 같은 규칙으로 축적될 수 있는 구조가 잡혔는가**로 판단한다.

② 2개월차(2026년 6월): 핵심 주제 축적과 아카이브 형성

둘째 달의 목표는 행정논평의 강점 분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범위를 넓히기보다, 행정논평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집중 축적한다.

우선순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행정청의 회피성 답변
- 처분사전통지의 형식적 운용 또는 절차 하자
- 정보공개청구 대응
- 위반건축물·형질변경·석축 등 현장 행정 쟁점
- 민원인의 문제제기를 흐리는 답변 방식
- 실제 대응 문서로 전환 가능한 법령해석

이달에는 단발 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글 묶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글 하나가 완결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글의 발판이 되고 이전 글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이 단계의 목표는 행정논평을 처음 본 사람이 “무슨 글을 쓰는 곳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주제 일관성을 만드는 것이다.

③ 3개월차(2026년 7월): 실전 대응형 콘텐츠 전환

셋째 달부터는 단순 논평을 넘어서, 실제 문서 작성과 대응 절차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한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필요하다.

- 민원서·정보공개청구서·의견제출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논리 정리형 글
- 자주 반복되는 회피 답변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정리한 실전형 글
- 사건별 대응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형 글

- 개별 사건을 넘어서 유형 전체에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형 글

이 달의 핵심은 좋은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행정논평의 글이 독자의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절차와 서면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행정논평은 단순 비형 공간이 아니라 **실전 대응 플랫폼**의 성격을 갖기 시작한다.

④ 4개월차(2026년 8월): 신뢰장치와 운영 규율 정비

넷째 달의 목표는 외형적 확장이 아니라 **신뢰의 제도화**다. 초기에는 글의 힘만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일정 분량이 쌓이면 곧바로 다음 문제가 생긴다.

: 증빙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반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수정할 것인지가 필요해진다.

따라서 이달에는 다음을 정비한다.

- 사건명 표기 방식과 날짜 표기 원칙
- 증빙자료 정리 기준과 출처 표시 방식
-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의 기본 처리 원칙
- 정정·추가·수정 이력 관리 방식
- 제보를 받을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와 검토 기준

이 단계는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행정논평이 개인적 분노의 게시판이 아니라 **편집 기준을 가진 플랫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⑤ 5개월차(2026년 9월): 외부 반응 유도과 사례 순환 구조 만들기

다섯째 달의 목표는 축적된 글이 외부 현실과 접속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새 글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올라간 글이 실제 민원, 정보공개청구, 질의서, 의견제출서, 준비서면 등의 논리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만든다. 가능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글을 실제 문서 작성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 체계를 강화한다.
- 유사 사안을 겪는 사람의 제보나 문의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정비한다.
- 사건 유형별로 “먼저 읽을 글” 묶음을 만들어 진입장벽을 낮춘다.
- 한 사건의 경과를 추적하는 연속 기록 구조를 강화한다.

이달부터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생긴다. 바로 **외부 반응**이다. 행정청이 글의 논점에 대응하거나, 유사 사례를 겪은 사람이 참고하거나, 누군가가 실제로 문서 작성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정논평은 단순 게시 공간을 넘어 **영향력**의 초기 징후를 갖게 된다.

⑥ 6개월차(2026년 10월): 베이스 캠프 도달 여부 점검 및 다음 단계 설계

여섯째 달의 목표는 확장이 아니라 **판정**이다. 지난 6개월이 단순 한 축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베이스 캠프를 세웠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점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형식이 고정되었는가
- 주제가 축적되어 아카이브로 연결되었는가
- 글이 실제 대응 문서의 재료로 활용 가능한가
- 외부 반응 또는 문의를 발생했는가
- 운영 규칙이 최소 수준으로 정비되었는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정한다.

: 기준 충족도가 낮다면 주제 집중과 구조 보강에 다시 집중한다.

: 기준 충족도가 중간 수준이라면 사례형 글과 대응 매뉴얼을 추가 축적한다.

: 기준 충족도가 높다면 제보자·기고자·사례 제공자를 포함하는 시민기자단형 구조를 검토한다.

즉, 여섯째 달은 종료가 아니라 행정논평이 1인 독립 논평 플랫폼으로서 베이스 캠프를 확보했는가를 판정하는 첫 번째 검토 시점이다.

10. 결론

행정논평은 오늘부터 단순한 메모장이나 개인 의견란이 아니다. 행정논평은 지역 행정사건을 기록하고, 행정행태를 해석하며, 법령을 대응절차로 바꾸는 독립 논평 플랫폼으로 출발한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등록 신문사나 협회 외형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실제 반응을 끌어내는 **공적 영향력의 베이스 캠프**다.

또한 그 베이스 캠프는 선언만으로는 도달되지 않는다. 초기 6개월 동안의 구조화, 축적, 운영 규율 정비, 외부 반응 유도를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

이 회의록은 그 출발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며, 향후 행정논평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수시로 다시 확인할 기준 문서로 남긴다.

2026. 4. 23.

대표 김훈철

행정논평